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

한국의 발전경험을 토대로
수원국의 빈곤 퇴치 · 자립 · 지속가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실천전략

2012. 9. 14.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I. 추진배경	5
II. 한국 ODA의 성과와 과제	7
III. 한국의 발전경험과 시사점	12
IV. 한국형 ODA 모델 추진전략	15
1. 기본방향	16
2. 한국형 ODA 사업 프로그램	18
(1) 개 관	18
(2) 영역별 ODA 프로그램	20
(3) ODA 기본 프로그램	26
3.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식	27
(1) 선택과 집중	28
(2) 현장과 성과	30
(3) 참여와 협력	32
(4) ODA 인프라 확충	34
V. 향후 추진계획	37

I. 추진 배경

- **(국제환경 변화)** 국제사회 개발협력 논의의 場에서 **개발효과성**과 국별 비교우위에 기반한 **원조분업** 및 **조화**가 강조되는 추세
 - **G-20 서울 정상회담**(¹⁰) 및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¹¹) 등을 계기로 개발협력 패러다임이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전환***중
 - * 원조효과성 : 원조의 전달 메커니즘 개선에 중점
 - 개발효과성 : 수원국의 성장, 역량배양 등 원조의 궁극적 목표에 중점
 - 공여주체 확대에 따른 **원조중복 해소** 등을 위해, 비교우위에 따른 **국제원조 분업**(Division of Labor) 및 **조화**(Aid Harmonization) 강조
- **(개도국 수요)** 상당수 개도국들이 단기간에 경제·사회 발전 및 민주화를 달성한 우리나라의 **발전경험 공유**를 강력히 희망
 - 우리나라는 원조를 **발전촉진제**로 활용, 최빈국에서 선진 경제권으로의 전환 등 **자립역량 배양** 및 **지속가능 발전 경험** 축적
 - 발전경험에는 일반화하기 어렵거나 실패했던 경험도 있지만, ODA 사업내용과 추진방식에서 **비교우위** 발굴의 원천
- **(ODA 효과 제고)** 향후 우리 ODA 규모의 **급격한 확대***에 대비, ODA의 효과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 대응** 요구
 - * '15년 GN 대비 0.25% 달성시, 예산규모 2배 이상 확대 전망('11년 1.9조 → '15년 4.3조)
 - 우리나라의 발전경험 및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수원국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함께, ODA 추진방식의 **재정비** 필요

“원조를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국 입장을 진정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 **한국형 모델을 정립**하고, 국제사회에 제시 활용할 필요”
(’12.1.14, 대통령님 장 차관 워크숍)

< 참고 : 국제사회 주요 논의동향 >

- 2000년대 들어 MDGs가 개발협력의 가장 중요한 최상위 목표로 등장하면서 국제사회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이슈를 전개

새 천년개발목표(MDGs)

- ◇ 제55차 UN 총회('00.9월)에서 189개국 대표 · 147명 각국 지도자가 '15년까지 달성할 8개 목표 및 21개 세부목표를 채택 · 발표

○ (More Aid) 원조 규모 확대 논의

- 몬테레이 UN 개발재원 고위급 회의('02)에서 원조 규모를 GNI 대비 0.7%로 확대키로 하고,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논의
- * 국가별 원조규모 확대(GNI 대비 0.7%), 혁신적 재원조달 방안 마련(항공권 연대기여금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PPP 등)

○ (Better Aid) 원조 효과성 제고 방안 논의

- 원조 피로(Aid Fatigue)'에 대한 반성으로 원조 효과성 논의 제기



① 로마선언 (HLF-1, 2003년)

: 수원국-공여국간 정책 · 절차 · 관행 조화에 중점

② 파리선언 (HLF-2, 2005년)

: 효과성 제고를 위한 5대 원칙 · 12개 성과지표 채택

③ 아크라 행동계획 (HLF-3, 2008년)

: 파리선언의 구체적 이행방안 제시

④ 부산 파트너십 (HLF-4, 2011년)

: 개발 효과성 논의 강조, 8개 중심의제 · 10대 이행지표 제시

○ (Aid Architecture) 신흥공여국, NGO 등 원조주체 확대*에 따른 원조 분절화(fragmentation) 극복을 위한 조화와 협력 추구

* 120여개 국제기구, 50여개 공여국 및 기타 민간 공여기관 등

- 원조 중복성을 없애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여국간 비교우위 분야 집중과 분업을 통해 원조 효율성을 제고

-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 이후 개발효과성 논의 강조 및 MDGs 종료시한('15) 도래에 따라 'Post-MDGs' 논의 필요성 제기

II. 한국 ODA의 성과와 과제

◇ EDCF('87)와 KOICA('91) 설립을 통해 본격화 된 우리 ODA는 OECD-DAC 가입, 기본법 제정 등을 기점으로 비약적 발전

- * OECD-DAC 가입('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10),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마련('10), G20 서울 정상회의 개발의제 주도('10) 등
- 통합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ODA 정체성을 확립 하고, ODA 사업의 효과성·효율성 제고 노력 필요

1 한국 ODA 주요 현황

□ (규모) 총 원조규모는 약 81억불*('87~'10, 총지출 기준)이며, ODA가 본격화된 '87년 이후 약 50배**에 이르는 급속한 증가

* ODA 규모(순지출, 백만불) : ('87)23.5 → ('96)159.1 → ('06)455.2 → ('10)1173.8

** '11~'12년 통계(잠정) 포함시, 총 규모는 108억불로 '87년 대비 약 80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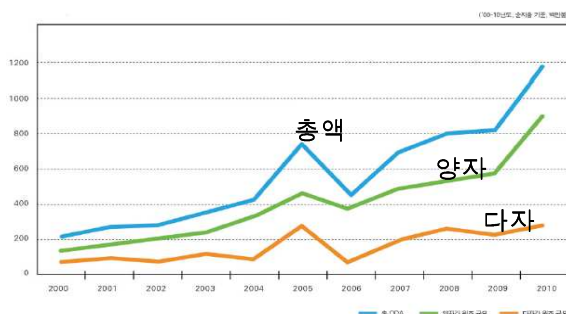
-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ODA를 지속 확대하여 증가율은 DAC 회원국(평균 $\Delta 2.7\%$) 중 '11년 6위(5.8%)를 기록

□ (특성) 우리나라 ODA는 아시아 중심, 유상차관의 적극적 활용 및 낮은 非구속성 비율 등이 특징적 요소

- 양자 對 다자는 약 7 : 3 내외, 무상 對 유상은 약 6 : 4 내외

*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10.10월,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따라, '15년까지 양자 對 다자, 유상 對 무상 비중은 同 비율을 유지

< 양·다자 ODA 추이 >



< 유·무상 ODA 추이 >



- 지리적·역사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06~'10년간 51%) 지원 중이며, 아프리카 지역 원조를 확대 중

□ (국제비교) 우리 ODA는 '15년 GNI 대비 0.25%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OECD/DAC 회원국 중 아직 하위권 수준

< ODA 규모 및 비율 국제 비교 ('11년 기준) >



2 한국 ODA 주요 성과

- (이념 정립) ODA 시행기관, 국제규범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제시된 ODA 이념을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정립·제시
 -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05) 이후 범정부 차원의 논의를 거쳐 국제개발협력 기본법('10) 및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10)에서 우리나라 ODA 이념을 법제화하고 정책문서로 제시

구 분		ODA 사업 이념
개별 단계	EDCF	개도국 산업발전·경제안정 지원 및 경제교류 증진
	KOICA	개도국 경제·사회발전 지원 및 우호협력·교류 증진
모색 단계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	원조이념·전략 등을 규정하는 통합법 필요성 제기
종합 단계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빈곤감소, 여성·아동 인권향상, 성평등, 지속가능 발전, 인도주의, 경제협력 증진,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

□ (프로그램 정리) KSP 모듈화 사업, 사업기술 정리 등 선진국과 차별되며, 개도국에 도움이 되는 ODA 프로그램 정리 추진

○ 경제·보건의료 등 개도국 수요가 많은 8대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경험, 사업기술 등을 단계적으로 정리중

* KSP 모듈화 : ('10) 20개 → ('11) 40개 → ('12) 40개

* 사업기술 정리 : ('11년) 134개 사업 정리 → ('12) 활용방안 마련

○ 또한, ODA 시행기관별로 정책자문, ODA 모델 개발 등 개발 협력 콘텐츠를 부분적으로 발굴·정리

* (기재부) : 정책자문('04~) (외교부) : 정책자문('91~), (각 부처) : 새마을 운동, 보건의료, 농업 등 분야별 ODA 모델 수립

□ (추진방식 정비) ODA 예산규모 확대에 따라, 우리 ODA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노력 지속

○ 개별적으로 제시*되던 ODA 이념을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으로 법제화하고,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을 통해 정책문서로 제시

* 대외경제협력기금법('86), 한국국제협력단법('91),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01),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0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05) 등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중심의 조정 시스템을 통해, 우리나라 ODA의 통합 추진체계를 마련

○ 26개 중점협력국 선정 및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중점협력 분야 지원 확대 등을 통해 ODA 사업 효과성 강화 추진

* CPS 수립현황 : ('11) 3개국 → ('12) 9개국 → ('13) 12개국[†]

□ **법제도적 기반 구축**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제정 ('10년)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기능 강화 ('10년)
- 총리실 중심 ODA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기관간 연계 강화
 - * 추진체계 : 총괄(총리실) - 주관(기재부/외교부) - 시행(EDCF/KOICA)
 - ** 연계강화 : 무상원조 관계기관협의회 및 EDCF 관계기관협의회 설치

□ **ODA 정책조정 및 통합 전략 마련**

- 범정부 차원의 ODA 정책문서 수립
 - *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1~2015) 및 연도별 종합시행계획 등 ODA 통합전략 수립 등
- 유·무상 통합 중점협력국가 선정 및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 통합 평가체계 및 범정부 통합 봉사단 브랜드(WFK) 구축

□ **원조규모 확대 및 질적 수준 개선**

- 대외 원조규모 확대 목표의 지속적 이행
- 무상원조 지원비중 확대 및 유상원조 지원비중 조정
- 여성, 환경, 인권 등 범분야 이슈 지원 확대

□ **ODA 관련 국제사회 위상 제고**

- OECD-DAC 가입 ('10년)
-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 계기 G20 개발의제 주도 ('10년)
-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개최 및 개발효과성 논의 전환 기여 ('11년)

□ **국민인식 제고 등 지지기반 강화**

- 관계부처 합동 홍보 T/F 구성 등 통합 홍보추진체계 및 계획 수립
- 통합 홍보 BI(Brand Identity) 선정 및 통합 ODA 홈페이지 구축
-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구축 확대

- **(이념 구체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에서 제시한 중장기 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우리 ODA의 **지향가치 구체화** 필요
 - 수원국 자립역량 배양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개도국 빈곤 퇴치 등 **MDGs** 달성 기여를 위한 구체적 **실행목표** 정립
 - 최근 논의되는 **개발효과성** 및 **Post-MDGs**와 관련 검토 필요
- **(프로그램 연계·총정리)** 우리가 강점을 가진 발전경험과 비교우위에 기반한 **사업 콘텐츠**들을 수원국 **상황**에 적합하게 **연계·결합**한 프로그램을 **구축·활용**할 필요
 - 개발경험, 사업기술 등 ODA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우리 ODA 성과(outcome)를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총정리**
- **(추진방식 체계화)**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ODA 프로그램의 현지화**와 우리 ODA **역량의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 필요
 - 우리나라 ODA **예산규모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 지속
 - 수원국 **지역연구, 정책대화** 등을 통해 성공요인을 높이고, 실패요인은 최소화하는 ODA 프로그램 **현지화** 노력 확대
 - **제한된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중점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간 연계 확대 등 **선택과 집중의 업무방식 정착** 필요
 - ODA 사업 시행기관, NGO·학계 등 민간부문, 他 공여국 등 ODA 주체간 **참여와 협력**을 통해 ODA 역량 **확충** 추진

- ◇ 2013년은 ‘Post-2015’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간 점검의 해
 - ‘선진화 방안’에서 제시된 중장기 전략을 바탕으로, 우리 ODA의 **정체성 확립**과 **구체적 실천전략(Action Plan)** 필요

Ⅲ. 한국의 발전경험과 시사점

- ◇ 발전경험 분석을 통해 ODA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추진방식까지 추출·정리하여 우리나라 ODA의 효과성·효율성 제고

1 한국 발전경험의 특징

- 우리나라 발전경험은 강력한 개발의지를 바탕으로 정부 주도 역량 결집과 사회발전에 따른 민간역할 증대의 특징 시현
 - 성장단계별로 차별화된 전략적 대응을 통한 경제성장과 교육·복지 등 사회역량 강화를 병행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
 - 강한 발전의지와 주인의식을 갖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전후 복구와 경제·사회개발에 해외원조를 적절히 활용
- 우리나라의 압축적 성장 경험을 비롯하여 녹색성장 등 새로운 비전 제시 및 추진경험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에서 공유* 희망
 - * “수원국은 한국의 경험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한국의 활발한 역할을 기대합니다.” (Rajiv Shah 美 USAID 사무처장)
 - 다만, 정책여건과 수원국별 특성이 상이한 만큼, 우리 발전 경험을 수원국 현실에 적합한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노력 필요

2 시대별 발전과정

1. 전후~60년대 : 해방과 전후 재건을 통한 국가기반 형성

- (경제) 경제기획원 설치, 중·장기 계획 수립, 농지 개혁 등을 통해 경제발전을 위한 기본체제 구축 추진
- (사회) 보건소법 제정('56), 의료인력 양성(미네소타 프로젝트), 초등교육 보편화 등 자립역량 확충을 위한 기반 형성 추진
- (원조) 전후 복구 원조, 농산물 원조 및 군사 원조를 중심으로 소비재 성격의 非계획 원조(비료, 석유, 의약품 등)를 중점 수원

2. 60~70년대 : 정부 주도의 수출지향적 성장 추진

- (경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본격화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산업 고도화와 수출 진흥을 통해 자립기반 확충
 - (사회) 기생충 퇴치, 1차 보건의료체계 구축*, 중등교육·직업 훈련 강화 등 지속발전 기반과 새마을운동 등 자립역량 강화
- * 보건소법 제정('56) 이후 189개 시군구 보건소 시설 및 인력 확충을 통해 전국 단위의 질병관리체계 및 치료체계 구축
- (원조) 다양한 형태의 개발원조 자금 지원 확대와 함께, 세계 정비 등을 통해 경제개발을 위한 재원을 뒷받침

3. 80년~90년대 : 경제 안정화 및 개방, 시장원리 강화

- (경제) 산업합리화 등 중점 투자분야 조정, 경제개방 확대·R&D 체계 정비 등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다각적 정책 추진
 - (사회) 쏘 국민 건강보험 가입('89), 고등 교육체계 구축 등 지속 가능 발전 기반을 확충하고, 민주화에 따른 거버넌스 개편 추진
 -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전환*에 성공하고, EDCF('87), KOICA('91) 설립을 통해 공적개발원조 시행을 위한 토대 형성
- * ADB 차관공여 대상국 제외('88) 및 UNDP로부터 순공여국 지정('92)

4. 90년대 이후 : 위기 극복과 미래에 대한 준비

- (경제) 공공·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과감한 구조개혁과 함께, FTA 등 적극적 개방 및 ICT·녹색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 발굴
- (사회) 기초생활보장제 실시, 고용지원 및 관리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전자정부 구축 등 정부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원조) ODA 규모 확대와 함께, G20 개발의제 주도('10),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채택('11) 등 개발협력 국제적 위상 제고

3 우리나라 발전경험의 시사점

- (발전지향 이념) 국내·외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를 대비하면서 지속가능 발전을 지향
 - (기반구축) 국가 주도의 종합 발전계획을 통해, 전후 피해 복구, 자원의 효과적 배분 등 발전기반 마련
 - (전략적 접근) 중화학공업 육성, 수출 주도 등 차별화된 전략적 경제성장과 함께, 정보화·환경문제 대응 등 다음단계 대비
 - (위기극복) 오일쇼크, IMF 경제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국민적 단결을 통해 극복하고, 녹색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
- (맞춤형 프로그램) 지속적인 비교우위 탐색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우리 환경에 적합하고 도전적인 프로그램 시행

구 분	주요 프로그램
~'60년대	▪ 저임금 기반 경공업 육성, 초등교육 보편화, 보건소 확충 등
'70~'80년대	▪ 수출진흥, 중화학공업 육성, 새마을운동, 전국민 의료보험 등
'90~'00년대	▪ 구조조정, 고용지원 및 관리, 기초생활보장제, 녹색성장 등

- (효과성·효율성 극대화) 주인의식, 선택과 집중, 성과 중심 등 프로그램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추진방식 견지
 - '원조의 덫'(Aid Trap)에 빠지지 않고, '주인의식'에 근거하여 원조를 자립과 지속가능 발전의 토대로서 효율적으로 활용
 - 발전단계별로 '선택과 집중*' 원칙을 통해, 성과 제고
 - * 경공업 → 중화학공업 → 정보화 → 신성장동력·녹색성장 등
 - 정부-민간부문간 역할분담 등 사회 주체간의 '유기적 협력'
 - 법·제도 구축, 필요인력 양성, 신속한 정책 대응 등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 기반'을 구축

IV. 한국형 ODA 모델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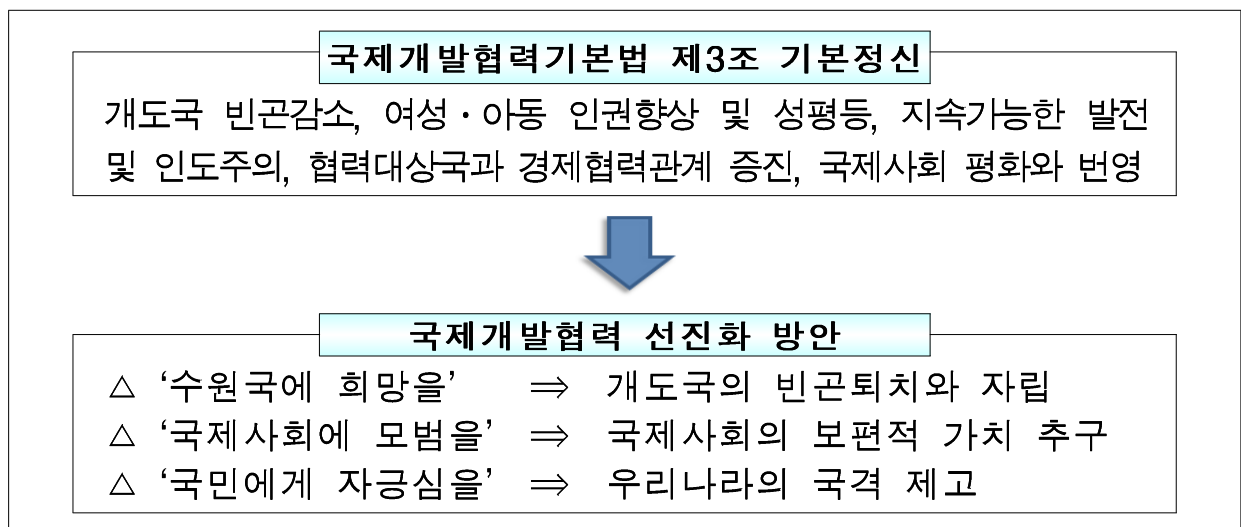
수원국 빈곤 퇴치, 자립 및 지속 가능 발전 지원



1 기본 방향

1 한국형 ODA 모델의 개념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국제개발협력의 중장기 전략인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구체화



- (개념) 우리나라의 발전경험과 비교우위를 토대로, 수원국의 수요와 여건을 중심으로 빈곤퇴치·자립역량 확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 실천전략

기본목표 수원국 빈곤퇴치 자립 및 지속가능 발전 기반 구축

-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과 역량 배양을 통해 수원국의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형성을 지원

추진방법 국제규범 존중 및 우리 발전경험과 비교우위 활용

- 발전경험과 비교우위 분석에서 도출된 ODA 프로그램과 추진방식을 수원국 상황과 국제규범에 맞게 적용

추진기조 수원국 중심주의와 원조 효율성 제고

- 수원국 수요와 현지환경을 기반으로 진정성 있는 원조

2

한국형 ODA 모델 추진원칙 및 방식

추진원칙

- ① “효과성” ⇒ 발전경험과 비교우위 활용
 -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및 선진공여국과의 원조분업 동참
- ② “조화성” ⇒ 국제사회의 규범을 존중
 - MDGs, 원조효과성 원칙 등 국제규범을 존중
- ③ “진정성” ⇒ 수원국의 수요 중시
 - 수원국 중심주의에 바탕을 둔 개발협력 추진
- ④ “호혜성” ⇒ 상호 협력관계 증진
 - 다각적 협력을 통해 양국간 중·장기적 신뢰관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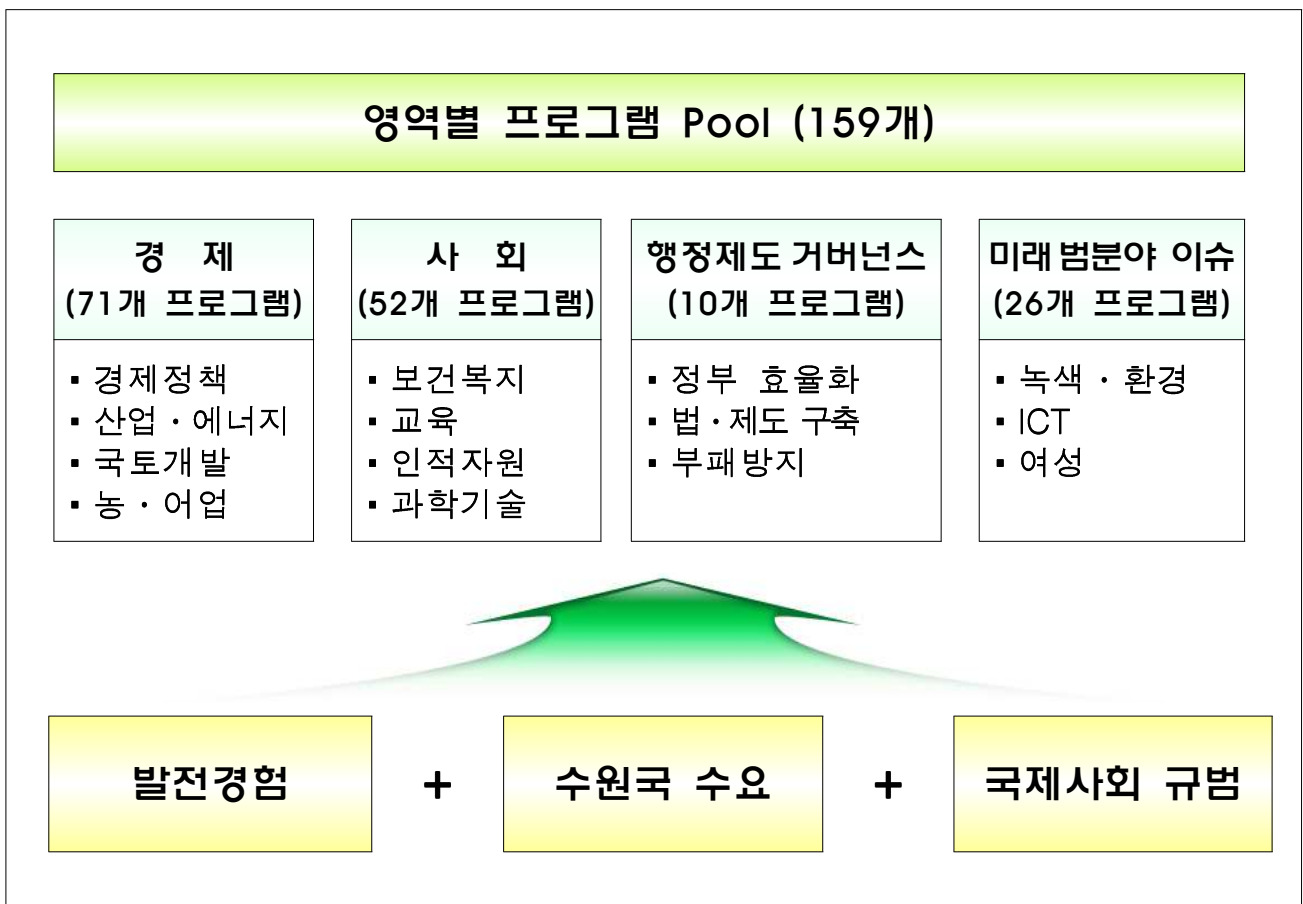
추진방식

- ① “선택과 집중” ⇒ ODA 역량의 전략적 효율적 활용
 - 제한된 ODA 재원규모 등을 감안하여, 우리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ODA 역량 집중
- ② “현장과 성과” ⇒ 사업의 실질적 효과성 강화
 - 수원국 및 사업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우리 ODA 프로그램을 현지화하고, 사업 전 과정을 성과중심으로 관리
- ③ “참여와 협력” ⇒ 포괄적 개방적 파트너십
 - ODA 주체간 포괄적·개방적 파트너십을 통해 시너지 효과 제고
- ④ “인프라 확충” ⇒ 한국형 ODA의 지속성 확보
 - 국민적 공감대 및 ODA 공급역량 제고 등 지속가능한 지원 기반 마련

2 한국형 ODA 사업 프로그램

1 개 관

- 우리나라가 가진 **발전경험과 비교우위**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ODA 콘텐츠를 프로그램 수준으로 총정리
- 경제, 사회, 행정제도·거버넌스, 미래·범분야 이슈 등 4개 영역에 대해 **총 159개의 ODA 프로그램 pool*** 구성
 - * 관계부처·기관 등 범정부적 프로그램 제안 및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ODA 프로그램 pool 정리
- ODA 재원규모 제약을 감안하여, 한국형 **ODA 정책비전 달성** 측면에서 우선적인 '**기본 프로그램(40개)**'을 선정





노르웨이 : Oil for Development 이니셔티브

- 노르웨이의 40여년간 석유산업 개발을 통한 경제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 석유산업 발전을 지원
- 자원이 풍부한 개도국의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해, 석유산업에 있어서의 자원, 재정, 환경관리를 위한 제도적 협력, 역량구축 등 거버넌스를 지원



미국 : Gender & ICT 프로그램

- USAID는 'Gender & ICT' 프로그램을 통해 ICT에 대한 여성의 접근 강화와 경제활동 기회 창출을 지원
- 주요 사업으로 방글라데시 그라민 폰(Grameen Phone), 세네갈과 모로코의 텔레부띠크, 가나의 전화 판매점 등을 지원



독일 : Energising Development 프로그램

- GTZ(독일기술협력공사)는 30여 년의 '에너지 현대화'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 효율-절약형 기술 보급을 지원
- 주요 사업으로 태양열·광 발전(방글라데시 프로젝트), 전력화 사업·풍력시설(세네갈 프로젝트), 소수력·바이오매스(우간다 프로젝트) 등 지원

경제영역 ODA 프로그램 (71개)

< 경제영역 발전경험의 주요 특징 >

◇ 한정된 자원을 '중·장기 경제정책'을 통해 전략적으로 배분

* (예) 경제기획원 주도 하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

◇ 상황변화에 따른 신속한 정책대응을 통해, 성공적 발전 기여

* (예) 경공업 → 중화학공업 → 산업합리화 → 첨단기술산업 → 미래성장동력

◇ 경제발전을 위한 제반 정책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

* (예) 국토종합개발-경제개발 5개년 계획간 연계 수립·시행

◇ 민간역량 강화를 통한 시장기능 육성·활성화 추진

* (예) 자본시장 육성, 규제개혁, 정책금융 조성

□ 경제성장을 위한 거시적 시스템 및 기간산업·인프라 등 경제 발전 기틀 구축 역량 육성 지원

○ (경제정책) 국가경제의 장기적 운용계획 수립, 대내·외 경제 질서 확립 및 과세기반 확충·재정관리 등 경제 인프라 구축

○ (산업·에너지) 산업화 및 고도화 준비에 필요한 산업정책·제도형성 역량 확충 및 중소기업·경공업 육성 지원

○ (국토개발) 국토개발과 경제·산업발전 선순환 구조 조성에 필요한 국토 종합개발 및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 (농·어업) 농림·수산업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등 생산성 확충, 유통관리 강화 및 농촌종합개발 등 생활환경 개선

< 경제영역 ODA 프로그램 >

분 야	프 로 그 램
경 제 정 책 (20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제기획 전담기구 설립·운영, △효율적 정부 재정관리 시스템 구축, △과세기반 마련, △경제자유구역 운영, △한국의 규제개혁 경험, △자본시장 육성, △국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조성, △국가통계 시스템 구축, △통관시스템 개선, △공기업 관리 프로그램 등
산 업 에너지 (12개)	△산업개발 정책 자문, △중소기업 육성전략 자문, △경공업 육성 지원, △광업 진흥 지원, 전력 인프라 구축, △대체 에너지 개발 지원, △산업 표준화 및 인증체제 수립지원, △녹색산업 육성지원,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자문 등
국 토 개 발 (19개)	△국토종합개발, △산업단지 개발, △도시개발사업, △신도시 개발, △다목적댐 건설, △서민주택 건설, △토지 정책제도 수립, △국토간선교통망 확충, △국가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공항 인프라 구축, △철도 현대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 등
농어업 (20개)	△농촌종합개발,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 △농업생산 기반 구축,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농업인력 육성, △농지제도 및 관리, △농업협동조합, △영농 기계화, △친환경 농업, △어항개발, △산림녹화, △수산물 양식기술 전수, △임산자원 개발, △농촌특화사업 개발, △가축질병 관리 등

사회영역 ODA 프로그램 (52개)

< 사회영역 발전경험의 주요 특징 >

- ◇ **경제-사회발전간 선순환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 기여**
 - * (예)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변경
- ◇ **정부 주도로 법·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회발전 기반 마련**
 - * (예) 보건소법 제정('56), 의료보험법 제정('63), 직업훈련기본법('76) 등
- ◇ **긴급한 수요 대응을 중심으로 정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 (예) 의료보험 : 500인 이상 사업장('77) → 공무원·사립학교·300인 이상 사업장('79) → 전국민 대상 ('89)
- ◇ **자립역량 배양을 위해 인적자원 양성 및 역량 강화에 집중**
 - * (예) 보편적 초등교육 → 중등교육 확충·직업기술교육 → 고등교육 → 국가차원의 인재교육·평생교육

- **정부 주도의 사회 발전기반 형성 및 제도 체계화와 함께, 경제-사회발전간의 선순환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지원**
 - **(보건복지) 기초 질병 극복,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통한 모자 보건 향상 및 전국민 건강보험 등 사회 복지 인프라 구축**
 - **(교육) 문해교육·초등교육 보편화, 단계별 교육체계 구축 및 평생학습·원격 교육 등 확산적 교육 인프라 구축**
 - **(인적자원) 직업훈련원 건립·기술자격 검정 등 직업훈련 기반 강화 및 경제발전에 대응한 기능인력 양성체계 구축**
 - **(과학기술) 적정기술 이전, 장비 현대화 지원 등 과학기술 자립역량 제고 및 연구기관·행정체계 등 육성 인프라 구축**

< 사회 영역 ODA 프로그램 >

분 야	프 로 그 램
보 건 지 (12개)	<p>△보건의료체계 강화를 통한 모자보건 사업, △보건소 중심 1차 보건의료 체계 강화사업, △지역거점 공공병원 현대화 사업, △기생충 퇴치 사업, △전국민 건강보험을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 보장성 강화, △응급의료체계 구축 프로그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구축,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인구 정책 등</p>
교 육 (16개)	<p>△초등교육의 보편화 지원, △직업교육인력양성 체계 구축 (한국형 마이스터고), △교원역량 강화, △문해교육 전개, △중등교육체계 구축, △원격교육체계 구축, △고등교육체계 구축, △교육 정보화 콘텐츠 개발, △평생학습체계 구축, △시민·근대화 교육, △지역 우수대학 육성 등</p>
인 적 자 원 (5개)	<p>△기능인력 양성, △숙련기술 장려 및 형성, △재직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국가기술자격 검정, △고용지원 및 관리</p>
과 학 기 술 (19개)	<p>△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행정체계 구축, △적정과학기술 지원, △기초과학연구 촉진, △과학기술분야 전문인력 양성, △과학기술 대중화·문화 확산, △이공계 대학 내 집단연구 지원, △국가과학기술정보 시스템 구축, △지식재산의 효율적 확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 △녹색 R&D 기반구축 지원,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 등</p>

행정제도 · 거버넌스 영역 ODA 프로그램 (10개)

< 행정 · 거버넌스 발전경험의 주요 특징 >

- ◇ 경제발전 초기부터 정부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추진
 - * (예) 행정개혁조사위원회 설립 ('64)
- ◇ 경제 · 사회발전 단계별로 선제적 대응과 수요 부응 노력 병행
 - * (예) 환경 전담기구 신설 · 승격을 통해 환경문제 대응 및 선제적 대응 추진
- ◇ 민관협력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 발전 추진
 - * (예) 지방자치 부활('95), 행정쇄신위원회('93)

□ 지방자치 · 정부운영 효율화 등 정부역량 강화와 함께 민 · 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원

- (정부 효율화) 전자정부 구축 · 국가 정보화, 행정 시스템 정비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부 조직개편 등 정부 역량 강화
- (법 · 제도 구축) 선거제도 · 지방자치 제도 등 발전단계별 안정적 정책 추진 및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법 · 제도 기반 구축
- (부패방지) 지속적 국가 · 사회 발전 기초 확립을 위한 비리 근절, 공무원 인사제도 개발 등 부패방지 추진

< 행정제도 · 거버넌스 영역 ODA 프로그램 >

분 야	프 로 그 램
정 부 효 율 화 (3개)	△정부 조직개편 · 조직진단 구축,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 구축, △관세 · 조세행정 구축
법 제 도 구 축 (5개)	△법체계 구축, △선거제도 운영 및 관리, △치안강화, △지방자치 제도 · 지방행정 역량강화 · 지역발전, △새마을운동 운영
부 패 방 지 (2개)	△공무원 역량강화 및 인사제도 개발, △부패방지

미래 · 범분야 이슈 영역 ODA 프로그램 (26개)

< 미래 · 범분야 이슈 발전경험의 주요 특징 >

- ◇ 경제위주 발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단계적으로 대응
 - * (예) 식수 공급 → 환경 오염 극복 → 기후변화 대응
- ◇ 문제 해결역량 확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 탐색 · 활용
 - * (예) (환경) 오염극복 → 녹색성장 (여성) 여성인력 양성 → 인구 노령화 대비

□ 환경 · 녹색, ICT, 여성 등 범분야 이슈 해결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 발전 기반 강화 지원

- (녹색 · 환경) 안전한 식수 공급, 환경오염 극복 및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환경 인프라 구축
- (ICT) 선진국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인력양성 및 정보 통신망 고도화 등 인프라 마련
- (여성) 여성 차별적 사회제도 개선, 여성역량 강화 및 여성의 지위 · 권한 제고 노력

< 미래 · 범분야 이슈 영역 ODA 프로그램 >

분 야	프 로 그 램
녹 색 환 경 (11개)	△안전한 식수 공급, △하수처리 · 관리 체계 구축, △폐기물 관리 체계 구축, △물 환경 보전, △기후변화 대응, △대기 환경 보전, △폐자원 에너지화, △토양오염 복구 등
I C T (7개)	△유 · 무선 브로드밴드 구축, △ICT 인력양성, △정보통신망 고도화, △ICT R&D 체계 구축, △국가 기간망 구축 등
여 성 (8개)	△여성정책 추진체계 구축, △모자가족 지원, △여성 농업인 육성, △여성 취 · 창업 지원, △여성과학기술인력 지원 등

3

ODA 기본 프로그램 (40개)

- 분야별 · 주요 시행기관별 전문가 설문조사를 거쳐, 발전경험상 ODA 추진역량, 수원국 수요 등을 기준으로 기본 프로그램(40개) 도출
- ODA 역량 및 수원국 수요 변화에 따라 기본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pool을 주기적으로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구분	기 본 프 로 그 램
경제 (15개)	<p>(경제정책)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제기획 전담기구 설립 · 운영</p> <p>(산업에너지) △산업개발 정책자문 △전력 인프라 구축</p> <p>(국토개발) △국토종합개발 △수자원 종합개발 △산단 개발, △도시 개발 △신도시 개발 △국토간선교통망 확충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p> <p>(농어업)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 △농촌 종합개발 △관개 · 배수 시스템 개발 관리 △농업생산기반 구축</p>
사회 (13개)	<p>(보건복지) △모자보건 사업 △1차 보건의료체계 강화</p> <p>(교육) △초등교육 보편화 △중등교육체계 구축 △고등교육체계 구축 △교원역량 강화</p> <p>(인적자원) △기능인력 양성 △고용지원 · 관리 △숙련기술 장려 · 형성 △국가기술자격 검정</p> <p>(과학기술) △과학기술 진흥 행정체계 구축 △KIST 설립 △적정과학기술 지원</p>
거버 넌스 (2개)	<p>(행정)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 구축 △새마을운동 운영</p>
미래 · 범분야 (10개)	<p>(녹색 · 환경) △안전한 식수공급 △하수처리 · 관리체계 구축 △물환경 보전</p> <p>(ICT) △국가기간망 구축 △정보통신망 고도화 △ICT 인력양성 △유 · 무선 브로드밴드 구축 △ICT R&D 체계 구축</p> <p>(여성) △모자가정 지원 △여성 직업훈련</p>

- 한국 ODA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선택과 집중’, ‘현장과 성과’, ‘참여와 협력’, ‘ODA 인프라 지속 확충’의 4가지 추진방식을 결합하여 이행
- 우리 ODA 역량의 **효율적 · 효과적 활용**을 위해,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ODA 프로그램에 **인적 · 물적 역량 집중**
 - 수원국과의 **긴밀한 협의** 및 **현장의견 수렴** 등을 거쳐 **ODA 프로그램을 현지화**하고, **성과 중심으로 체계적 관리**
 - 국내 기관, 민간부문, 수원국 및 국제사회의 **다양한 ODA 주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발 효과성 및 시너지 효과** 제고
 - 국민적 공감대 확산, 전문인력 양성 및 기업 참여 확대 등을 통해, 한국형 ODA가 **지속 가능토록 기반 구축**

<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식 >

추진 방식	선택과 집중	현장과 성과	참여와 협력	인프라 확충
세부 과제	중점협력 지원 강화 프로그램간 연계 강화 CPS 중심 이행 전문역량 확충	사업발굴시 공관 참여제고 현장역량 확충 통합평가 강화 사후관리 내실화	국내기관간 연계 강화 NGO 등 민관협력 강화 수원국 참여 · 협의 확대 국제사회 협력 · 진출 강화	정보제공 강화 전문인력 양성 참여기업 확대 국민 공감대 확산
프로그램	4대 영역 11개 분야 159개 프로그램			

◇ 집중성 · 연계성 · 일관성 · 전문성 강화를 통해 한정된 ODA 재원의 효과적 · 효율적 활용 극대화

□ [집중성] 한정된 재원의 집중 활용

- 중점협력국에 대해 양자 ODA를 70% 이상 지원하고, 검토 주기(3년)에 따라 ODA 규모를 감안한 중점협력국 규모 재검토*

* (예시) 현행 26개국 → 20개국 내외

- 중점협력분야 내 개별 사업의 예산 집중도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여, 중점협력분야 지원에 대한 실효성 제고

* (예시) 중점분야 내 예산 상위 3개 사업의 예산 집중도 70% 이상

- 기본 ODA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프로그램형 사업을 확대 하여, 단위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의 완결성을 제고

* (예시) 무상분야 사업 500만불 이상, 유상분야 사업 5천만불 이상

□ [연계성] 맞춤형 패키지 프로그램 강화

- 중점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수원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패키지 프로그램'*(SWAp : Sector Wide Approach) 추진

* (예시) 물관리 ODA 모델 : 저수관리+하수관리+식수공급+물환경보전 등

- 단순 프로젝트형(Stand-alone) 사업을 지양하고, 인프라 구축과 역량강화를 결합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

* (예시) 정책자문+개발조사+프로젝트+전문가파견 · 초청연수+자금협력 등

- 예산지원 방식(Budget Support) 등 맞춤형 패키지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지원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 및 단계적 확산

* ('13년) 도입방안 연구 → ('14년) 시범실시 → ('15년) 성과평가 및 확대 검토

- 관계부처·기관간 협의를 강화하고, 연계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발굴 및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 (예) KOICA-EDCF 및 KOICA-관계부처간 협의회 정례화 등

□ [일관성] CPS 중심체계 정착 및 정책일관성(PCD) 확보 노력

- 국가협력전략(CPS) 가이드라인 체계화, 예산 연계성 강화* 및 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국별 ODA 사업의 최상위 전략문서化

* ODA 사업예산 심의시 CPS 반영여부를 최우선 검토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별부처 사업을 CPS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

- 개발협력 분야와 他 정책간 정책일관성(PCD)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추진체계 구축 및 시범실시 검토

* (예시) 대외경제·외교정책 수립시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PCD 실무조정 협의

□ [전문성] ODA 프로그램 정책 집행의 전문성 강화

- 기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업모듈을 심화·발전시키고, 프로그램 Pool을 주기적으로 조정하여 품질관리 실시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보완을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 구성 검토

* 민간자문위 역할 및 구성방안, 운영계획 등 마련

- KOICA·EDCF 등 ODA 시행기관의 전문인력 채용 확대, 기관간 인력교류 강화, 현지인력 채용 등 전문성 강화

◇ 사업 발굴·형성 → 사업 결정·집행 → 평가·사후관리의
 쏠 과정을 '현장과 성과' 중심 관리 시스템으로 구축·운영

□ (사업발굴) 재외공관 참여도 제고를 통한 체계적 협의채널 구축

○ 개별부처는 수원국과 정책협의를 외교부를 통하여 재외공관과
 협의하고 재외공관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며, 재외공관은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여 필요한 지원을 실시

○ 개별부처는 수원국과 협의시 재외공관과 정보공유를 강화

○ 유·무상 통합 정책협의를* 확대, 관계부처를 포함한 범정부
 대표단 구성을 통해 수원국과의 정책협의를 내실화

* 베트남·미얀마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금년중 캄보디아·인니 추가 실시 예정

○ 현지 실정에 적합한 사업형성을 위하여 타당성 조사(F/S)를
 강화하고 현지조사 기간을 확대

* 대규모 ODA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는 시범실시('12) 이후 확대 여부 검토

□ (사업집행) ODA 사업현장의 인력 조직 역량 강화

○ KOICA·EDCF 등 주요 시행기관의 현장인력 및 조직역량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집행권한을 대폭 이양

< KOICA·EDCF 조직진단 결과 ('11.1월) >

구 분	KOICA		EDCF	
	2011년	2015년	2011년	2015년
현장조직	35개소	35개소*	9개소	12개소
현장인력(비율)	83명(34%)	143명(41%)	12명(16%)	23명(16%)

* 참고 : 중점대상국 3개소 증가 및 非중점대상국 3개소 철수로 同數

- ‘ODA 관련 재외공관 역할 강화방안’ (‘10.10월)을 적극 시행하고, 중점협력국 공관 평가시 ODA 비중 확대 추진

* 주요 내용 : 개발협력담당관 지정, 현지 협의체 운영, ODA 계획 및 사업발굴, 수원국 협의, 평가 과정에 적극 참여

- 수원국 재정·조달 시스템 활용* 확대를 통해 현지실정에 적합한 물자 및 기자재 활용

* 수원국 재정시스템(PFM) 사용비중은 10% 수준(DAC 평균 48%)이며, 수원국 공공조달시스템 활용은 36% 수준 (‘10년 기준)

□ [사업평가] 통합평가 및 현장중심 평가 강화

- 자체평가와 소위평가간 역할분담* 및 모든 평가결과의 원칙적 공개**, 이행상황의 주기적 점검 등 통합 평가체계 내실화

* (자체평가) 소관사업별 평가 → (소위평가) 국가별·분야별 평가 등 범부처 차원 평가

** 평가결과 비공개 여부는 평가소위 심사를 거쳐 결정

- 수원국 정부와의 공동 평가비중 확대* 및 현지의견 수렴을 강화하여 수혜자 중심·현지 중심 평가 강화

* (예시) 수원국 공동평가 비중 : (‘13) 10% → (‘14) 30% → (‘15) 50%

□ [사후관리] 사후관리 의무화 및 주기적 보완

- 수원국 수요 및 정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기본 ODA 프로그램’ 및 국가협력전략(CPS)를 주기적으로 보완 (3년 단위)

* ODA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수원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 구체적 모니터링 방안 및 CPS 재수립 기준 마련

- ODA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평가결과 활용 및 이행 상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방안을 포함토록 의무화

◇ 국내·외의 다양한 ODA 주체간 포괄적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개발 효과 및 협력 시너지 효과 제고

□ 국내 관계기관간 유기적 연계

- 분야별 협의체 및 관계부처 회의 등 협의 활성화를 통해 사업간 중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연계를 강화

* 'ODA 모니터링 시스템(수은)'을 본격 운용하고, 관계 기관에 전면 공개하여 사업 진행상황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

- 관계기관간 인력교류* 실시, 공동 워크숍·세미나 개최 등 교류협력 기반 구축 및 상호 이해 확대

* 「관계부처-KOICA-EDCF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 수립 ('12.下, 기재부·외교부·EDCF·KOICA)

- 사업기획-결정-집행-평가 등 단계별 관계부처 참여를 강화하여 부처별 전문성을 활용하고 ODA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정부-민간 부문간 협력 활성화

- 정부와 NGO간 협의채널 구축, 협력사업 지속 확대와 함께, 개발협력 파트너로서 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 수립

* (예시) 총리실-해외원조단체협의회간 정책 설명회 ('12년 2회 개최) 등

- 기업의 글로벌 투자 및 사회공헌(CSR)과 연계하여, PPP 사업을 활성화하고, 업종별 협회 등 협의채널 구축을 통한 사업 발굴

- ODA 전공·강좌 개설* 지원 등 주요 연구기관 중심으로 Think-Tank 육성 및 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서울대, 경희대, 고려대 등 39개교에 국제개발협력 관련 전공 개설 ('10년)

□ 수원국의 참여채널 확대

- 수원총괄기관 및 우리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원국 개발전략과 ODA 사업간 연계 등 **주요사항 협의**
 - * (수원국) 수원 총괄부처, 중점분야 주관 부처 및 재정·인사·조직 전담 부처 등 (우리측) 재외 공관, 현지 KOICA·EDCF 사무소 및 관계부처
- 수원국 정부와의 **공동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현장 의견을 평가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평가의 현장성 확보
 - * (예시) 수원국 공동평가 비중 : ('13) 10% → ('14) 30% → ('15) 50%
- 실질적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 주요 거점연구기관 교육환경 개선·초청연수 및 자문단 구성 등 **인적자원 파트너십** 구축
 - * 방한 연수생 동창회 등 전·현직 공무원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수원국에 대한 실질적 의견 전달 및 우리 정부·민간과의 교류·협력채널로 활용

□ 국제사회 협력 및 진출 확대

-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 후속조치에 따른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개발 논의의 주도적 지위 구축
 - * 우리나라는 同 파트너십 집행위원회 멤버로 참여
- **중점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선진국, 신흥 공여국 및 글로벌 펀드 등과의 **협의 활성화***(Aid Architecture) 등 **원조조화** 강화
 - * 26개 중점협력국 중 24개국에 '공여국협의체' 구성·운영중
- 국제기구에 대한 **인력진출*** 확대 및 공동 협력사업 추진과 함께, 신탁기금 구조개편을 통한 **전략적 활용 강화**
 - * 국제기구 진출현황('12.5) : UN 체제기구(244명), 국제금융기구(171명), 정부간기구(43명)

- ◇ 정보제공 강화, 전문인력 양성, 참여기업 확대 등 ODA 공급역량 제고를 통해 한국형 ODA의 지속가능 기반 확충

□ 통합 정보망 내실화 등 ODA 정보제공 강화

- ODA 콘텐츠, 통계 및 전문가 정보 등의 주기적 보완 및 유관 정보망*과 연계·공유를 통해 「ODA 통합 홈페이지」 내실화

* 해외조달통합정보망(KOTRA), 국제통상정보서비스(전경련), 무역정보네트워크(무역협회) 등

- ODA 정책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주기적으로 개발협력 백서*를 발간하여 정부의 ODA 정책 현황 및 방향을 제시

* 유·무상 통합 ODA 백서 발간 ('13년)

□ ODA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 ODA 양성기관 현황 및 인력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ODA 전문인력 수급전망 및 양성계획*' 수립 추진

* 사전조사(KOICA·EDCF)를 거쳐 수립하고, 범정부 인력수급전망과 연계 검토

- 관계부처, KOICA·EDCF 및 국책 연구기관 등을 통한 ODA 정책기획 및 연구인력 양성 프로그램 강화

* 개발협력 전문가 및 전문분야별, 지역별 전문가 양성 병행 추진

- 대학(원)의 ODA 교육과정을 대상별로 세분화*하여 개설하고, NGO 등 시민사회 연계를 통해 ODA 인력양성 기반 확충

* (청년층) 봉사단 등 사업 수행인력 위주 / (퇴직인력) KSP 모듈화 등 사업 자문단 위주

□ ODA 참여 기업 확대

- 국내 개발협력 컨설팅 기업의 시장 진출기반 조성을 위해, ODA 사업 참여확대 방안 모색 및 설명회 개최* 등 추진
 - * 제1회 국제금융기구(MDB) 조달 설명회 既개최 ('11.6월)
- ODA 사업절차 및 참여방법 등 안내 매뉴얼 제작, 타당성 조사 및 서류작성 지원 등 실무 정보* 및 컨설팅 제공 확대
 - * 해외건설협회, 플랜트산업협회, 해외자원개발협회 등 업종별 협회 중심 설명회 검토
- 수원국 주요 인사 초청 연수시 우수 중소기업 방문 및 전시회 참관 지원, 금융지원* 활성화 등 우수 중소기업 지원 강화
 - * 국제기구 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P-300)에 대해 무역보험 지원범위 확대 (국제기구→국제기구+해외정부) 및 지원한도 우대(일반 기업의 2배 이내)
- 국내·외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기업, 연구기관, NGO 등 민간의 ODA 참여확대를 위한 '범정부 통합지원전략*' 수립
 - * 개발협력 컨설팅 발전방안('12.下),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12.下) 등

□ 국민적 공감대 확산

- ODA 통합 슬로건, BI(Brand Identity) 및 홈페이지 등 통합 홍보 인프라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홍보 T/F' 운영 내실화
 - * (예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

< ODA 통합 BI 및 슬로건 >



“대한민국의 기적,
이제는 나눔으로”

“Beautiful Sharing,
Wonderful Growing”

- 정기 여론조사 실시, 매체별·대상별 맞춤형 홍보 콘텐츠 마련 등 '통합 ODA 홍보전략'을 연도별로 수립하여 추진

수원국 가상상황 (농업 분야)

- (경제) 농지는 풍부하지만 수자원 활용 미흡 → 낮은 식량 자급률
- (인력) 부족간 내전 경험 → 남성인력 부족, 청년층 · 여성 일자리 부족
- (보건) 내전 경험 및 보건 인프라 부족 → 높은 유아사망율
- (SOC/기반) 자본부족과 내전 피해 → 도로 · 댐 · 발전소 등 인프라 미흡

비교우위 사업 선정
(농촌종합개발)

- 수원국과의 정책대화를 통해
농촌 종합개발 ODA 수요가 높은
지역 선정

ODA 추진역량 집결
(협력강화 및 현장중심 관리)

- 마스터플랜 수립 (관계기관협의회)
- 사업 전반의 성과중심 시스템 운영
- 재외공관 중심 사업성과 현장관리

수원국의 직접 수요 부응
(농업기반 마련)

- 농작물 저장/가공시설 지원 (예: KOICA)
- 농업역량 강화 (예: 농식품부/행안부)
- 댐, 대규모 인프라 건설 (예: EDCF)

수원국 맞춤형 사업 심화
(지속가능 발전 지원)

- 농촌 보건소 확충 (예: 복지부)
- 식량작물 생산성 확충 (예: 농식품부)
- 숙련기술 장려 (예: 고용부/교과부)

V. 향후 추진계획

□ 한국형 ODA 모델의 체계적 활용

- 성과달성이 미흡한 과제를 제외하는 등 기존 사업심의* 및 신규 사업발굴시 패키지 사업모델 기준으로 활용 (각 부처)

* 한국형 ODA 모델 요건 충족시 예산 우선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 검토

□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 유상 및 무상원조 분야별 시행계획 수립시 '한국형 ODA 모델'의 구체적 이행방안 수립·반영 (기재부·외교부)
- 각 부처별 추진과제에 대해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각 부처)

□ 체계적 품질관리 및 주기적 보완

- ODA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 구체화 등 분야별 후속연구* 추진을 통한 지속적 품질관리 (각 부처)

* 부처별로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소관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는 연구 추진

- 추진실적 평가, 수원국 협의 등을 바탕으로 '한국형 ODA 모델'을 3년 주기로 지속 보완(Rolling-Plan) (총리실)

□ 적극적 홍보 및 성과공유

- 수원국, NGO, 他 공여국, 국제기구 등에 '한국형 ODA 모델'을 적극 홍보하고, 성과(Best Practice) 공유 및 확산 추진 (각 부처)

VI. 각 부처별 추진과제

구 분	추진과제	일 정	소관부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성 제고			
-1	중점협력국의 주기적 재검토	계속	총리실 · 기재부 · 외교부
-2	국가협력전략(CPS) 수립 가이드라인 체계화	'12.下	총리실 · 기재부 · 외교부
-3	정책일관성(PCD) 추진체계 구축 추진	'12.下	외교부 · 관계부처
현장과 성과 중심의 사업 수행체계 정착			
-1	재외공관 ODA 사업 관련 평가기준 수립 추진	'12.下	외교부
-2	통합 평가체계 내실화 추진	'13.上	총리실
-3	사후관리방안 수립 의무화	'13	각 부처
참여와 협력을 통한 개방형 ODA 생태계 구축			
-1	관계부처-KOICA-EDCF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 수립	'12.下	기재부 · 외교부 · EDCF · KOICA
-2	민 · 관협력 활성화 방안 수립	'12.下	총리실
-3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후속조치 추진	'12.下	외교부 · 관계부처
ODA 인프라 확충			
-1	ODA 통합 홈페이지 내실화	계속	총리실
-2	개발협력 백서 발간	'13.下	총리실 · 기재부 · 외교부
-3	ODA 전문인력 수급전망 및 양성계획 수립 추진	'13.下	관계부처 · 기관 합동
-4	개발협력 컨설팅 발전방안 수립	'12.下	기재부 · 외교부

ODA
정책비전
최초 제시

1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 (2005.11)

- (내용) 비교우위 활용, 중점지원국 선정, 종합계획 수립 등 대외원조 운영체계 효율화를 위한 5대 추진방안* 제시
 - * ① 한국형 원조모델 정립 ② 원조 추진시스템 개선 ③ 원조 효율성 제고 ④ 인프라 구축 ⑤ 국민 참여 확대 등
- (의미) 관계부처·민간 협의 등을 거쳐 국가 전략차원에서 마련한 최초의 대외원조 개선 중·장기 비전



ODA
정책기반
조성

2 ODA 중기 국별 원조전략 (2008~2010) (2008.1)

- (내용) 중점 지원국* 선정, 지역별·국별 지원전략 등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효율적 ODA 정책수단 제시
 - * 18개 중점지원국 선정 및 유·무상 통합지원전략 수립 추진
- (의미)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수립한 중기 국별 원조전략으로, 우리나라 ODA '기반 조성'에 기여



ODA
선진화
방안 제시

3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2010.10)

- (내용) 개발협력 콘텐츠, 추진 시스템 및 국제사회 협력 등 3대 분야 선진화 및 인력양성 등 추진기반 확대 방안 제시
 - * 26개 중점협력국 선정 및 유·무상 통합지원전략 수립 추진
- (의미)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및 유·무상 통합추진체계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 ODA 종합 정책문서



ODA
선진화
방안
구체화

4 한국형 ODA 모델 추진방안 (2012.9)

- (내용) 우리나라 발전경험 정리 및 비교우위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ODA 협력 프로그램 및 추진방안* 제시
 - * 40개 기본프로그램 및 4대 이행방식 제시
- (의미)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우리나라 ODA 지향가치, 협력 프로그램 및 추진방안 구체화

국가	주요 집중분야 (%)	대륙별 배분 (%)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정책 · 생식보건 (17.8) 공공행정 · NGO (17.2) 인도적 지원 (1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시아 (32.6) 미지정 국가 (25.1) 아프리카 (29.2) 아메리카 (10.2) 유럽 · 오세아니아 (2.9)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송·저장 (29.7), 에너지 (17.6), 식수공급 및 위생 (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시아 (46.6) 아프리카 (25.7) 미지정 국가 (21.3) 유럽 (8.7) 오세아니아(2.4)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21.4) 교육 (15.4) 공공행정 및 NGO (1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시아 (32.3) 미지정 국가 (25.7) 아프리카 (24.2) 아메리카 (11.4) 유럽 · 오세아니아 (6.4)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행정 및 NGO (13.6) 환경보호 (10.7) 물자지원 및 일반프로그램 원조 (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프리카 (38.4) 미지정 국가 (33.6) 아시아 (25.7) 아메리카 (1.6) 유럽 · 오세아니아 (0.8)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17.0) 부채관련 지원 (15.9) 환경보호 (12.6) 기타 다부문 (1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프리카 (53.8) 아시아 (19.9) 미지정 국가 (12.9) 아메리카 (8.5) 유럽 · 오세아니아 (4.9)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행정 및 NGO (18.1) 농업·임업·어업 (1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지정 국가 (38.9) 아프리카 (26.6) 아시아 (19.2) 아메리카 (12.2) 유럽 · 오세아니아 (4.2)

자료 :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DB 추출

순번	분야	프로그램명
1	경제정책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	경제정책	거시경제 운용·관리
3	경제정책	효율적인 정부 재정관리 시스템 구축
4	경제정책	과세기반 마련: 부가가치세 등
5	경제정책	한국의 원조수혜경험 활용
6	경제정책	경제위기 극복 프로그램
7	경제정책	경제기획 전담기구 설립·운영
8	경제정책	한국의 규제개혁 경험
9	경제정책	자본시장 육성
10	경제정책	국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조성
11	경제정책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12	경제정책	공기업 관리 프로그램
13	경제정책	국가통계시스템 구축
14	경제정책	WTO 가입 프로그램
15	경제정책	FTA 로드맵 및 협상전략 전수
16	경제정책	경제자유구역 운영
17	경제정책	무역인력 양성
18	경제정책	통관시스템 개선
19	경제정책	무역관련 금융지원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20	경제정책	수출지원 기관(KOTRA, KITA) 설립 및 운영
21	농어업	농촌종합개발
22	농어업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
23	농어업	농업생산 기반 구축
24	농어업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25	농어업	관개·배수 시스템 개발 및 관리
26	농어업	농업기술 개발 및 현장지도 지원 시스템
27	농어업	농업인력 육성
28	농어업	가축사육 및 관리
29	농어업	농지제도 및 관리
30	농어업	농업협동조합
31	농어업	경제작목 재배 및 시설원에
32	농어업	친환경농업
33	농어업	영농 기계화
34	농어업	농식품 안전·위생관리
35	농어업	어항개발
36	농어업	산림녹화
37	농어업	수산 양식기술 전수
38	농어업	임산자원 개발
39	농어업	농촌특화사업개발
40	농어업	가축질병 관리
41	국토개발	국토종합개발
42	국토개발	산업단지 개발
43	국토개발	도시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44	국토개발	신도시 개발

순번	분야	프로그램명
45	국토개발	녹색도시 정책
46	국토개발	다목적댐 개발 (수자원 종합개발)
47	국토개발	역사문화도시 조성계획
48	국토개발	서민주택 건설
49	국토개발	토지 정책제도 수립
50	국토개발	민간투자를 통한 인프라 구축 체계 개발
51	국토개발	국토 간선도로망 구축
52	국토개발	국가공간정보시스템(NSDI) 구축
53	국토개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
54	국토개발	한국형 고속철도 시스템 구축 및 사업화 프로그램
55	국토개발	공항 인프라 구축
56	국토개발	도시철도 및 경전철
57	국토개발	철도현대화
58	국토개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방안
59	국토개발	교통 데이터베이스 구축
60	산업에너지	산업개발 정책 자문
61	산업에너지	전력 인프라 구축
62	산업에너지	광업 진흥 지원
63	산업에너지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구축
64	산업에너지	에너지 절약 기술 보급
65	산업에너지	지역산업 개발 정책 지원
66	산업에너지	경공업 육성 지원
67	산업에너지	대체에너지 개발 지원
68	산업에너지	중소기업 육성 전략 자문
69	산업에너지	산업표준화 및 인증체제 수립지원
70	산업에너지	녹색산업 육성 지원
71	산업에너지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자문
72	보건복지	보건의료체계강화를 통한 모자보건사업
73	보건복지	의학교육 중심 보건의료분야 인력 교육사업
74	보건복지	보건소중심 1차 보건의료 체계강화사업
75	보건복지	지역거점 공공병원 현대화 사업
76	보건복지	기생충 퇴치 사업
77	보건복지	전 국민 건강보험을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 보장성 강화
78	보건복지	폐결핵 관리 사업
79	보건복지	필수예방접종체계 구축
80	보건복지	응급의료체계 구축 프로그램
81	보건복지	빈곤경감 및 자활도모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구축
82	보건복지	복지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83	보건복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
84	인적자원	기능인력 양성
85	인적자원	국가기술자격 검정
86	인적자원	고용 지원 및 관리
87	인적자원	숙련기술 장려 및 형성
88	인적자원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
89	교육	초등교육의 보편화지원
90	교육	산업화를 위한 직업교육인력양성 체계구축 (한국형 마이스터고)
91	교육	교원역량 강화

순번	분야	프로그램명
92	교육	문해교육 전개
93	교육	중등교육체계 구축
94	교육	원격교육체계 구축 (EBS, 방통대 등)
95	교육	고등교육체계 구축
96	교육	교육정보화 콘텐츠 개발
97	교육	한국형 산학연관 협력 특성화교육
98	교육	지역우수대학 육성
99	교육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지원
100	교육	유아교육·보육체계 구축
101	교육	평생학습체계 구축
102	교육	시민·근대화 교육
103	교육	교육분야 정책연구 기관 설립
104	교육	국가 수준의 교육개혁 기구 설치 지원
105	과학기술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행정체계 구축 (조직, 제도, 정책 등)
106	과학기술	KIST설립·운영시스템 구축
107	과학기술	적정과학기술 지원
108	과학기술	기초과학연구 촉진
109	과학기술	과학기술분야 전문인력 양성
110	과학기술	과학영재 발굴·육성 (과학고, KAIST형)
111	과학기술	한국형 사이언스파크 조성
112	과학기술	무역활성화를 위한 국가표준 인프라 구축
113	과학기술	과학기술 대중화·문화확산
114	과학기술	이공계 대학 내 집단 연구 지원
115	과학기술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
116	과학기술	경제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기업의 자생적 연구환경 조성
117	과학기술	국가과학기술정보 시스템 구축
118	과학기술	방사선기술을 활용한 의료 및 산업기술발전 지원
119	과학기술	연구·학술정보 및 시험연구장비 현대화
120	과학기술	지식재산의 효율적 확산을 위한 시스템구축
121	과학기술	지속가능한 해양이용 역량강화
122	과학기술	인공위성을 활용한 농촌생활 개선
123	과학기술	녹색성장시대 편입 : 녹색R&D 기반구축 지원
124	행정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 구축
125	행정	새마을운동 운영
126	행정	공무원 역량 강화 및 인사제도 개발
127	행정	관세·조세행정 구축
128	행정	부패방지
129	행정	정부 조직개편·조직진단 구축
130	행정	지방자치 제도·지방행정 역량강화·지역발전
131	행정	선거제도 운영 및 관리
132	행정	치안강화
133	행정	법체계 구축
134	녹색·환경	안전한 식수 공급
135	녹색·환경	하수처리·관리 체계 구축
136	녹색·환경	폐기물관리 체계 구축
137	녹색·환경	물 환경 보전
138	녹색·환경	기후변화 대응

순번	분야	프로그램명
139	녹색 · 환경	대기환경 보전
140	녹색 · 환경	자연환경보전 기반구축
141	녹색 · 환경	폐자원 에너지화
142	녹색 · 환경	환경보건정책 기반구축
143	녹색 · 환경	토양오염 복구
144	녹색 · 환경	사전 예방적 국토환경관리
145	ICT	유·무선 브로드밴드 구축
146	ICT	ICT 인력양성
147	ICT	정보통신망 고도화
148	ICT	정보화마을 구축
149	ICT	국가기간망 구축
150	ICT	ICT R&D 체계구축
151	ICT	전파관리체계 구축
152	여성	여성정책 추진체계 구축
153	여성	모자가족지원
154	여성	여성 농업인 육성
155	여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156	여성	여성 취·창업 지원
157	여성	정치분야 여성대표성 증진을 위한 제도
158	여성	여성과학기술인력 양성
159	여성	성별영향분석평가

붙임 4

시대별 주요 발전경험

구 분		해 방 ~ '60년대 초	'60년대 초 ~ '70년대 말	'80년대 초 ~ '90년대 말	'90년대 말 이후
정책 환경		냉전 / 한국전쟁	석유파동	탈냉전 / 신자유주의 · 세계화	외환위기 · 글로벌 경제위기
주 요 정 책	경 제	경제발전 기반 마련 시장경제질서 도입 경제기획원 설립 · 중기계획 수립 농지개혁	고도성장 가시화 중화학공업 육성 · 공업화 수출진흥 정책 경부고속도로 건설	산업합리화 개방 확대 산업합리화 · 금융자유화 수입자유화 등 개방 확대 R&D 체계 정비	위기대응 성장잠재력 확충 4대 부문 구조개혁 FTA 등 적극적 개방 추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사 회	부분적 기반 마련 기생충 퇴치 의료인력 양성 초등교육 보편화 등	선순환 구조 기반 구축 가족계획 · 1차 의료체계 구축 중등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의료보험 등 사회안전망 도입	사회복지 제도 정착기 기초보건의료체계 확대 국민 건강보험 가입 고등교육체계 구축 등	사회안전망 확충 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공공고용 · 실업안전망 구축
	행 정 거버넌스	제도 구축 통치형태(대통령 중심제에 내각책임제 가미) 엘리트 관료 등장	발전국가 독임제 행정기관 형태 새마을운동 행정개혁조사위원회 설치	민주화 권위주의 청산과 작은 정부 지방자치 · 행정쇄신위원회 등 거버넌스 개편	국가경쟁력 제고 규제개혁 내실화 부패방지제도 강화 전자정부 구축 등
	미 래 범분야	인식 미흡 미래이슈(녹색 · 여성 · ICT)에 대한 인식 미흡	필요성 인식 미래이슈(녹색 · 여성 · ICT)에 대한 인식 증가	제도기반 마련 환경 전담부서 신설 정보화 정책 추진 등	본격 추진 및 심화 여성 전담부서 신설 등 신성장동력 · 녹색성장 육성
	개 발 협 력	전후 복구 전후복구 · 식량 · 군사원조 등 非계획원조 집중	개발원조 효과적 이용 상업차관 등 대규모 개발 원조 자금 수원	공여국 전환 기반 마련 공여국 전환 EDCF('87), KOICA('91) 설립	제도 선진화 ODA 확대 · 추진체계 개편 국제 개발협력 논의 주도
시사점		대외원조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국가기능 유지 및 발전 기반 마련	한정된 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제성장 본격화 사회발전 기반 형성	사회발전 및 거버넌스 개편 압축성장 문제점 대응 및 미래 성장동력 탐색	외환위기의 성공적 극복 사회안전망 확충강화 미래 성장동력 발굴 · 심화